

북한의 최근 기술 중시 및 IT산업 육성 정책의 의미

서재진(통일연구원)

◆ 논문 요약 ◆

이 논문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 및 IT 산업 육성 정책의 성격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이 과학기술에서의 근본적인 혁신만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방향이 소련의 초기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입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과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IT 산업에 경제회생의 승부수를 걸고 있으면서도 폐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IT 산업의 육성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사상통제를 지속하면서 기술 개발만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도개선 없이 과학기술을 발전하고자 하는 정책하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다섯가지와 IT 산업 정책상의 문제점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IT 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으면서 다른 전통산업분야의 개혁개방은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IT 산업은 개혁개방을 지연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고, 동시에 여타분야에서의 개혁개방이 없는 IT 산업의 발전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한다.

I. 문제제기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체제 위기속에서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는 몇 개의 중요한 정책을 선택하여 추진했으나 대체로 여의치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북한은 최우선 과제로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여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핵문제가 돌출되면서 중단된 이후 아직도 교착상태에 있다. 북한은 즉시 미국과의 수교로 전

략목표를 바꾸었으나 핵문제, 미사일 문제 등의 현안이 제대로 협상이 안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별 진전이 없다.

경제정책면에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내부 경제체제는 변화시키지 않고 경제를 희생시켜보고자 했으나 외자유치총액이 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로 끝난 뒤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농업, 경공업, 무역 부문을 강조하는 3대제일주의도 추진해 보았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아직도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 그 동안의 생존정책들이 선군정치 등의 내부통제 정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사자가 아직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북한이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구상한 것이 과학기술의 적극적 개발과 IT 산업 육성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1999년 1월부터 과학기술중시사상 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여 기술중시를 사상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2000년 신년공동사설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으로까지 지위를 격상하기에 이르렀다.

10년간의 경제난 끝에 북한 당국이 선택한 길이 과학기술 육성과 IT 산업 발전을 통한 성장전략이다. 2001년 새해 벽두에 북한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는 구호도 과학기술과 IT 산업 중시 정책을 염두에 둔 인식이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은 성장전략의 면에서 볼 때 노동력, 원료 등의 투입량을 증대시키는 외연적 성장방식과는 달리 생산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내포적 전략이다.

북한이 경제성장의 방식을 외연적 방식에서 내포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안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진전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실제로 북한이 과학기술과 IT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느냐 하는데는 많은 의문이 든다. 북한이 최근 과거의 중앙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동안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고 식량난 이후 만연하고 있는 암시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군중동원에 의한 생산성 향상 운동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강원도에서 시작된 토지정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차원에서 개간한 폐기밭들을 몰수하면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정책적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당분간은 시장제도의 도입이 없으며, 사유제로의 변화가 없으며,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 세 가지 정책적 조치의 특징은 식량난 이후 흐트러졌던 사회주의 체제의 원형을 다시 수선하는 작업들이라는 점이다.¹⁾ 이처럼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와 IT산업 육성정책이 구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매우 수구적이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와 IT산업의 육성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며, 얼마만큼의 경제적 합목적성이 있는 것인지, IT 산업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의 향후 변화 방향 전망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II. 북한의 발전전략과 기술정책의 관계

1. 중공업 우선의 발전전략과 기술의 관계

북한이 과학기술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최근의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 정권의 초기부터 매우 강조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김일성의 대중연

1) 서재진, 『식량난에서 IT 산업으로: 변화하는 북한』, (지식마당, 2001) 참조.

설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사상 다음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매달려야 했던 배경을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는 중공업 우선 발전이라는 경제발전 노선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정권 초기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일제의 잔존 공업시설 정비와 가동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50년대 말 이후에는 소련과의 갈등 및 중소관계의 갈등 등의 상황 때문에 제1차7개년 계획(1961-1970) 기간은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책하에 기계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중공업은 기본적인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임기간도 장기적이고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산업이지만 북한은 기술개발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부르짖었던 ‘기술혁명’은 곧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계제작은 농업과 공업의 기계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일성의 표현으로는 손노동과 등짐에서 벗어나 기계화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기술의 개념을 “인민들을 고되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게 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이라고 보았다.²⁾

기술발전을 위하여 북한은 기술교육을 강조하였고 7개년계획기간(1961-1970)에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기도 하였다.³⁾

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기술발전을 위하여 대외적 경제협력에 대하여 다소 유연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자본부족과 기술낙후 및 시설 노후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경제가 외채상환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제적 신용도가 실추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동구 등에 주재하던 북한의교관

2) 김일성,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0년 8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4권.

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1년 9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15권.

들이 신분상의 특권을 이용하여 밀수를 벌이다 추방되기도 하였다.⁴⁾

중공업의 발달에 의한 경공업의 후방 연쇄효과가 70년대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으나 북한은 경제발전 노선을 수정하지 않고 중공업우선의 발전노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 6개년계획(1971-1976) 기간동안 기술발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대중동원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3대혁명으로 규정하여 전 주민을 기술혁신어로 동원하고, 1973년부터 이를 지도하는 3대혁명소조를 공업 부문과 농업부문에 파견하였다. 1975년부터는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기술발전의 과제를 3대기술혁명으로 제시하였다. 3대기술혁명이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줄이기,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 줄이기, 여성의 가사노동 해방을 포함한다.⁵⁾

2. 내포적 성장에의 관심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력 절감과 내포적 성장을 위해서였다. 북한은 기술과 기계에 의거하기 보다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방식, 즉 외연적 성장전략을 '인해전술'이라고 비판하면서 내포적 성장에의 관심을 보였다.

지금 일부 공장에서는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 (아직도) '인해전술'을 쓰는 방법으로, 다시말하여 로력지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고 로력이 남는 나라라면 몰라도 로력사정이 긴장한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해서는 안됩니다.⁶⁾

4) 통일연구원, 『남북한국력추세비교연구』, (통일연구원, 1993), p. 185-186.

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권.

6)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8권.

경제성장의 침체가 뚜렷해지는 70년대말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8년 2월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분야별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동원, 과학자기술자능력대를 조직하여 생산 및 건설 현장에 이들을 파견하고 생산현장에서 직접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독려하였다. 제2차7개년계획(1978-1984)의 기본과업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설정하였다.⁷⁾ 이처럼 1970년대말 이후로 정책적 강조점이 전환되었다. 공학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기계화에서 자동화로의 전환이 강조되었고, 생산방법에서는 외연적 생산방법 (또는 조방적 생산방법)에서 내포적 (또는 집약적) 생산방법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으며, 경공업혁명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성장체계에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1980년대는 북한이 발전전략으로서 대외경제교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 주된 내용은 대외무역 특히 수출에 대한 강조와 자본조달 및 기술도입에 있어서 대서방 경제협력이었다. 김일성은 1980년초 이례적으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자본의 직접투자를 위한 길을 열기도 하였다.

또한 80년대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1984년 김일성의 동구방문 이후 전자공업에 큰 관심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8년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을 발전시켜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로봇화하고 유연생산체계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다만 기계에 지령이나 주고 단추를 누르면 공장이 저절로 돌아가고 제품이 쏟아져나오는 무인조정생산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⁹⁾

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계획(1978-1984)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8) 박형준, 김태영, “북한의 과학기술”, 김문조 편, 『북한사회론』 (서울: 나남출판, 1994), pp. 133-134.

전자공업, 자동화 공업은 주로 김정일 주도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주도하에 2차에 걸친 과학기술3개년계획(1차: 1988년 7월~1991년; 2차: 1991년 7월~1994.6월)을 추진하였다. 이들 계획은 당초 기계공업, 전자, 자동화, 화학공업, 농업 등 경제주요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추진되었으나 성과는 부진하였다.

북한에서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과학기술 발전 캠페인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및 경제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과 자력갱생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발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는 발전전략이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과 자력갱생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고, 중공업은 곧 기계제작 공업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자체의 기술발전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김일성이 중공업 특히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은 기술혁명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¹⁰⁾

결국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정책적으로는 내포적 성장의 길을 강조했으나 실제 기업수준에서는 외연적 성장전략이 주류를 이루었다.

3.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과학기술

북한이 기술개발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계획경제체제 때문이다.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모든 경제의 주체와 생산의 요소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통보가 필수적이다. 정보화와 같은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자본주의에서보다 더욱 긴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의 인식에서도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

9) 김일성,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8년 11월 30일), 『김일성저작집』.

10) 김일성,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0년 8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4권.

계획기관 일꾼들이 능률적으로 사업하도록 하려면 계획화 수단들을 현대화하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하려면 계획기관 일꾼들이 방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 만큼 계획화수단들을 결정적으로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계획일꾼들의 머리수나 늘이는 방법으로는 방대한 계획화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계획기관들이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계획화사업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일꾼들이 현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계획기관들에 지금 쓰고있는 수공업적인 계산수단 대신에 전자계산기를 널리 받아들여 계획화수단의 전자계산기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¹¹⁾

북한은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경제계획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계획화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당은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지국계획위원회들과 시(구역), 군 국가계획부와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를 설치하였으며, 성, 중앙급 기관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계획부서들로 하여금 계획화사업에서 해당기관에 복종하는 것과 함께 국가계획위원회에도 복종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하는 계획의 일원화체계가 서게 되었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들이 직접 전반적 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지방 및 기업소들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릴 수 있게 한다. 계획의 세부화를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장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계획적 균형발전 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여 나라의 경제를 아무런 혼란도 없이 높은 속도로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¹²⁾

북한은 기계공업의 강조 덕분에 초기에는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성과를

11) 김정일,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1일, 『김정일선집』 2권.

1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거두었다. 또한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한에서는 이들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국제시장에서 교환하지 않고 북한내에서 소비하는 소비품을 충당하는 정도의 경제단계에서는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노동력과 원자재 등의 생산요소가 고갈되고 노동력의 정치적 도덕적 호소에 의존한 동기부여가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자 북한 경제의 성장률은 쇠퇴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그렇게도 강조하였는데 북한의 과학기술은 큰 진전이 없었다. 그 까닭은 정책밖의 구조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북한의 중공업우선 발전 및 자력갱생 전략이 어떻게 기술발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60년대의 경공업 우선 발전 및 수출주도 전략과 비교해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한국경제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이 오직 노동력 하나만 풍부한 상태에서 가능한 효율적 산업화의 전략으로서 국제경제의 하청구조에 편입하여 경공업위주의 가공무역을 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가공무역이란 생산에 필요한 공장설비 등의 자본재와 중간재 등 생산요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를 조립, 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자본순환이 지배적인 산업조직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경제개발은 개발초기부터 외국무역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자본재, 중간재 및 기술의 도입은 그 자체로서 수입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도입이 차관이나 무역신용 등에 의한 외상도입일 경우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환수입을 위한 수출의 확대도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의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경우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며 그를 위해서 수출기업의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어 조립 가공기업은 조기대형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한국 경제가 국제무역에 편입구조의 특징은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만들어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국제하청구조였다.¹⁴⁾ 이러한 정식화된 국제분업구조에서

13) 강철규, 『가공무역과 산업조직』 (산업연구원, 1988), pp. 40-41.

14) Martin Landsberg,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Third World: Manu

한국은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경공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60년대 초반부터 수출기업의 조기대형화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남한의 60년대 경제발전 전략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여 대형 조립공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발전전략이었다. 남한은 60년대 경공업에서부터 출발하여 70년대에 중화학공업으로 이어지는 공업화의 심화 발전의 유형을 걸었다. 중화학공업 단계에서 기술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또 고도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었다. 중화학공업에서의 진전과 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IT 산업에서의 강세를 보이는 경쟁력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 경공업 단계에서부터 첨단산업 단계에 이르는 성장의 과정을 거처온 것에 비하면 북한은 아직도 정권 초기의 중공업 우선 발전 단계의 구호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북한 경제가 침체를 면하지 못한 핵심적 원인중의 하나로 되었다.

III. 북한의 정보산업 정책의 시동

90년대 이후의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정보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정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북한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첫 계기는 1984년 김일성의 유럽순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일성은 각국의 정보기술 발전상을 보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순방국가들과 각각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생을 유럽 각국에 파견하여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컴퓨터 관련 인재육성을 위하여 1985년에 4년제 컴퓨터 인력 양성 전문 기관인 조선계산기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이어 1986년에는 프로그램 개발

-facturing Imperialism." Th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11(4), 1979.

15)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은 최신림, 『북한의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 (산업연구원, 1999.1) 참조.

전문기관인 평양정보센터, 그리고 1990년에는 조선컴퓨터센터를 설립하였다.¹⁶⁾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제1차 과학기술개발 3개년 계획(1988~91)은 15개 종합과제와 44개 대상과제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초대규모 집적회로, 대출력 고내압 반도체 생산의 공업화와 경제 주요부문의 전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아울러 하드웨어와 자동화 요소 등의 생산에 비중을 두었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94)은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산자동화와 초대규모 집적회로 생산의 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했으며, 16메가 초대규모 집적회로 개발과 함께 32비트 초소형 컴퓨터의 공업화와 64비트 초소형 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¹⁷⁾

그러나 심화된 경제난으로 이런 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그 뒤를 이은 바세나르협정의 규제에 의해 첨단 컴퓨터 장비의 도입 곤란으로 하드웨어 부문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단계로서, 최근 들어 북한이 다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김정일 정권이 다소 정치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1998년부터이다. 1998년 2월 8일 김정일이 「전국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시찰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킬 것을 지시한 이후 대중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¹⁸⁾ 이를 계기로 컴퓨터 대학, 컴퓨터 학부, 컴퓨터 학과, 전공반, 프로그램 센터가 설치되었고 컴퓨터 기술자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고 한다.

1998년부터 각급 중등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한 이후 1999년 말 김일성종합대학에 처음으로 컴퓨터과학대학을 설치하였으며, 김책공업

16) 박찬모, “북한의 정보기술과 남북협력,” 『통일시론』, 1999년 봄호, p. 124.

17) 박찬모, 위의 글, p. 124.

18) 조선컴퓨터센터 최응철 기사장의 발언 (일본의 라디오 프레스, “북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北朝鮮政策動向』, 제14호, No. 310, 2000년 12월 31일; 『KDI 북한경제리뷰』, 2001.1 p. 65에서 재인용.

대학, 평양전자계산기대학 등 주요 대학에도 프로그램 학과를 설치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정보통신 부문을 전담할 주무부서로서 전자공업성이 설치되었다.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경제발전 전략이 형성된 데는 1998년 8월의 광명성 1호 시험발사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명성 1호는 8만여 개의 부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조립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뒤이어 1998년 9월 개정헌법 27조에서 “기술발전 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 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리자”고 강조하였다.

해마다 신년사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한 문장 정도의 언급이 있었지만 1999년부터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과학기술은 추상적인 차원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을 의미한다.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조국의 부흥 발전이 과학자·기술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과학자·기술자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린 그 본때로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온 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게 해야 한다.¹⁹⁾

과학기술에 대한 중시는 김정일이 1999년 1월 11일 신년 첫 현지도로서 과학원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현지도도를 계기로 1999년 1월 16일 『로동신문』은 “과학중시 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여 과학중시 정책을 ‘사상’ 수준으로 격상하였다. 이 논설에서 북한은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을 달려 과학기술 발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부흥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가 달려 있다”고 주

19)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1999년 1월 1일).

장하였다. 북한은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한 바 있다.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공동사설은 높은 혁명성에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성공담을 쌓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과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바로 정보기술산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대외적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000년 5월에 김정일 위원장은 18년만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베이징 소재 中關村을 방문한 이후 정책 방향은 점차 구체성을 띄어간 것으로 보인다. 바로 한달 뒤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여 남한과의 관계를 일신하였고, 바로 또 한달 뒤인 7월 4일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을 내놓았다. 신년사에서나 공동사설 형식으로 국가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북한이 「과학중시 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공동사설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이 혁명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인식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혁명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 높은 혁명성 더하기 과학기술, 이것이 사회주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라고 주장했다.

2000년 8월 1일에는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쏘 올린 그 기세로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창조해 나가자! 전자공학, 생물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며 전자자동화 공업과 컴퓨터 공업 발전에 힘을 넣어 21세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자!”라고 외쳤다.²⁰⁾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타겟은 정보산업이다. 정보기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여 경제를 단번에 회생하고, 나아가 강성대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소위 ‘단번도약’ 전략이다. 중국처럼 점진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러

20) 『로동신문』 2000.8.1.

시아와 같은 나라처럼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단번에 경제를 회생한다는 것은 확실히 새로운 사고임에는 틀림없다. 얼마만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80년대까지 북한에서 기술은 곧 기계제작공업을 의미했는데 비하여 이제 북한에서 기술은 정보기술을 의미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공업 우선 전략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산업이 특화산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일의 발언이라고 인용한 노동신문의 한 기사는 “20세기는 기계제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 것”²¹⁾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 우리사회에서는 정보산업의 발전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게 하며 정보산업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전적으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되므로 누구나 다 정보산업의 발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²²⁾고 하면서 정보산업에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전략적 주력산업으로서 첨단과학과 기술로 이루어진 정보기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택하여 경제회생의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인식을 다음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

자원이나 팔아먹고 관광업이나 해서 살아가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그르치는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부흥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과학기술 발전을 외면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영토도 크지 않고 자원도 제한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자원이나 캐서 팔아먹을 내기만 하면 남은 것은 빈 굴과 황폐화된 강산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거기에서 먹는 문제도 풀고 경제 강국도 건설해야 한다. 과학기술만이 자체로 살아 나가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고한 투쟁에서 체득한 고귀한 진리이다.²³⁾

21) “정론: 과학의 세기”, 『노동신문』, 2001년 4월 20일.

22) 정광복, “정보산업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결정적 우월성”, 『노동신문』, 2001년 4월 29일.

23)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론설, “과학중시 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2000.7.4).

과학기술에 의거한 첨단산업의 발전만이 살 길이며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이는 지난 10여년간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 제일주의, 금강산 관광업,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득한 진리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느정도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북한 지도부는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회생 전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북한은 “이미 사상도 건설하고 총대도 굳건하므로 이제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 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서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류는 머지않아 주체의 강성대국, 과학기술 강국으로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 조선을 보게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²⁴⁾

오물 쪼물 뜯어 맞추고 남의 꼬리를 따라가는 식으로서가 아니라 단번에 세계 최상의 것을 큼직큼직하게 들여앉히려는 것이 우리의 배심이다.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진부한 관습과 유물들을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무엇을 하나 해도 손색이 없게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때이며 위력이다. 우리는 단번도약의 본때를 이미 맛보았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탄생도 그것이었고 토지정리의 천지개벽도 그것이었다. 고난의 시기 여기 저기 일어선 몇쟁이 공장들도 그것이었다.²⁵⁾

북한은 IT산업 육성이 단순히 전망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IT산업을 통해서 단번에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단번도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처럼 농업개혁부터 시작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발전 단계와 중화학공업 발전 단계를 지나서 비로소 IT산업을 도달하는 전통산업의 발전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IT산업을 착수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단번도약의 전략을 ‘새로운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이 단번도약이라는 전략을 생각해 내고는 살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매우 고무되어 있는 듯하다.

24) 위의 신문.

25) 『로동신문』, 정론: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 (2001.1.7).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눈보라 길과 천리 전선 길에서 무르익히시고 작성하신 21세기 조선의 전략은 명쾌하고 강위력하다. 선군정치로 우리의 정치, 군사적 기초를 천백배로 다지고 그 힘에 의거하여 최단기간 내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 경제강국의 대열에 위풍당당히 들어서자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용단이고 명략이다. 이것은 속도에 있어서 빨치산 대오의 '일행천리' 전술이며 방법에 있어서 단 번도약과 같은 통쾌하고 신묘한 지략이다.²⁶⁾

북한이 선택한 발전 전략은 중국처럼 농업과 공업 부문에서 자본주의 제도와 시장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경제를 희생하는 전략이 아니라 첨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여 단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난날 다른 나라 식의 낡은 틀과 관례를 벗어난 우리 식'이라는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이다.

IV. 북한의 최근 기술 중시 정책과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와의 관계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중시정책,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진', 정보화, 자동화 등의 경제정책이 발전전략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내용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최근 새로운 과학중시 정책 선택의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볼 때 북한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소련공산당 제27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시대에 대하여 "경제를 내포적 발전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긴밀한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경제의 과학기술 드라이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가 시동된 동기이다.²⁷⁾

26) 위의 신문.

27) Mikhail Gorbachev, "Political Report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to the 27th Congress of the CPSU", *New Times*, Moscow, March 10, 1986), Alexander Anchishkin, *Science, Technology, and the Economy* (Moscow: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침체에서 시발된 것인만큼 정책방향은 최초에는 경제회생에 가장 큰 우선 순위가 주어졌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왜 필연적인가를 경제학적으로 해명하려면 사회주의의 확대 재생산 구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까지 소련의 경제구조는 외연적 확대 재생산 구조라 할 수 있다.²⁸⁾ 외연적 확대재생산이란 생산수단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생산수단을 가능한 한 양적으로 많이 투입하여 산 노동의 절약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막대한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이 점점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구조 위에서 소련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85년까지 국민의 실질 소득은 생산규모의 확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인 1981년부터 1985년까지 국민의 실질 소득은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페레스트로이카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정책면에서 이 외연적 확대재생산 구조를 내포적 확대재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포적 확대재생산 구조로의 전환은 생산수단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경제성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이 과학기술 지식을 생산수단으로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에는 과학기술 정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대회인 198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7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는 “인류진보는 과학기술혁명과 직결되어 있다”²⁹⁾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소련의 사회-경제의 가속적 진전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만들었다. 이 개념은

Progress, 1987), 김성환 옮김, 『사회주의의 미래와 과학기술 혁명』 (푸른산, 1990), p. 8에서 재인용.

28) Alexander Anchishkin, *Science, Technology, and the Economy*, p.312.

29)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제27차 당대회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보고』, (Political Report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to the 27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Moscow, 1986), pp. 10~11, Alexander Anchishkin, *Science, Technology, and the Economy*, p. 7에서 재인용.

1986~90년의 소련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지침과 2000년까지의 시기를 위한 지침에 설명되었고 그 후 제12차 5개년 계획(1986~2000)에서도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제27차 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일환인 과학기술 진보의 기본 방향으로 과학기술의 전면적 촉진, 생산기술의 개선, 자동화의 추진, 과학-기술-생산의 통합, 기초과학의 발전 등을 설정했다.

이 모든 당 문헌 및 정부문헌에서 핵심적인 것은 과학과 기술의 가속적 진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전체 사회경제 발전이라는 이념이다. 국민경제를 기술적으로 새로이 재편하여 경제효율, 즉 노동 생산성에서 급속한 상승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련의 전략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사회생산의 전면적 내포화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생산의 성장률과 인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지향했다.

그러므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발전의 전략은 비록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와 관련된다. 즉, 제27차 당대회에서 제창된 경제성장 가속화의 개념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은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나온 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두권의 홍보 및 교본의 목적으로 발간된 책이 있다. 그 하나는 1986년에 나온 Alexander Anchishkin의 책³⁰⁾으로서 바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성공의 한 관건인 과학기술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책이다. 이 책은 고르바초프의 노선에 따라 그리고 이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의 진보, 그리고 이 진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하나의 책은 1989년에 나온 K. Abtopob의 책이다.³¹⁾ 이 책은 중앙계획명령경제체제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통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통제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씌어진 책으로서 매뉴얼의 형

30) Alexander Anchishkin, *Science, Technology, and the Economy*.

31) K. Abtopob, *Fundamentals of Scientific Management of Socialist Econom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9).

식을 갖추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사회주의에서 자동화 통제시스템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서의 관리효율성도 높이며 결국 생산량을 높이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화 통제시스템은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며, 정보의 소통을 개선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³²⁾ 그 까닭은 초기에는 덜 복잡한 경제 단계에서는 정보는 쉽게 수집되며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갔으나, 경제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기는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³³⁾ 이 교본은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및 자동화의 제반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초기에는 주어진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현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체제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민주화로 확대된 것은 초기의 고르바초프가 계획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동안 외연적 경제성장에 주력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³⁴⁾ 기술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의 경제회생 전략은 소련의 초기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소련이 외연적 성장전략을 내포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였듯이 북한도 그 동안의 외연적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내포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책하에 국내의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핵심이었다. 1957년부터 천리마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가지 형식의 속도전 운동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노동을 투입하여 원자재 생산과 제조업 및 농업부문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한계

32) *ibid.*, p. 191.

33) *ibid.*, p. 203.

34) 양문수, “북한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 외연적 성장의 내부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2000).

에 달했다는 것은 최근의 경제난이 증명해 준다.

소련이 내포적 성장전략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였듯이 북한도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현존 경제의 정보화 자동화를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도 현존 경제의 정보화 자동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련이 1989년에 *Fundamentals of Scientific Management of Socialist Economy* 교본을 출판하였는데 북한에서는 1992년에 그와 매우 유사한 내용인 「경제 관리업무 자동화체계」를 발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모델을 따라서 나온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의 것을 보고 배운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시간 순서로 볼 때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책의 서문에서 북한은 “생산경영단위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커지고 생산기술공정들이 고도로 현대화, 과학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생산단위들 사이의 생산의 유기적 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새로운 현실은 경제관리운영에서도 치차와 같이 맞물려지고 신속정확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절실한 요구로 제기한다”고 지적하였다.³⁵⁾ 소련책의 요지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

이 책이 출판될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극도의 경제침체와 자원 및 원자재난으로 관리업무 자동화체계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책은 소련 책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책에서 김정일의 말을 인용하여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 기술수단을 받아들여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다그치자면 경제조종학과 경제수학적 방법이 이룩한 성과를 실정에 맞게 잘 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³⁶⁾

이 교본은 기업소 관리업무 자동화체계를 실현하여야 생산경영활동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인 기술경제적 통보들을 제때에 수집, 전달, 가공, 보관하여 기업소의 생산 지휘는 물론 전반적 인민경제에 대한 생산조직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⁷⁾ 이 교본은 또한

35) 리동준, 『경제관리업무자동화체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p.3.

36) 위의 책, p. 5.

관리업무자동화 체계는 현대적인 계산수단인 전자계산기를 기본기술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복잡한 경제수학적 모형도 정확히 풀어 최량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지적하고 있다.³⁸⁾ 1992년에 발간된 「경제관리업무 자동화체계」가 빛을 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2000년 들어서의 일이다.

V. IT 산업 육성정책의 정치적 의미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하는 정책의 유형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³⁹⁾ 첫째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에 그랬으며 고르바초프의 초기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정책도 그러하였다.

둘째는 사회주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를 개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서 오늘날의 중국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인간의 사상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서 지금까지의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된다.

북한에서 최근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종전의 사상중시 유형에서 벗어나되 제도개혁 유형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상중시 유형을 지속하면서 기술중시 유형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⁰⁾

실제로 북한은 사상만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기술중시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노동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다. 천리마운동, 속도전 운동,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 등이 그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체제위기시의 체제단속용으로 사상의 중요성이 우선시되었다. 북

37) 위의 책, p. 19.

38) 위의 책, p. 21.

39) 양문수,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중시 정책,” 『통일문제연구』 제 13권 1호 (2001년 상반기), p. 193 참조.

40) 위의 글, p. 194.

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했던 90년대 초기에는 체제 유지에 사활을 걸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 지도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권 유지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보였다. 체제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상 단속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혁명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 —높은 혁명성 더하기 과학기술, 이것이 사회주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⁴¹⁾

북한이 사상중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이러한 인식은 IT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북한이 IT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택하여 경제발전의 승부를 걸겠다는 결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몇 가지 배경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 내에서 급작스런 경제개혁을 원하지 않으며 체제에 아무런 변화 없이도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이 IT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⁴²⁾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소유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인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대에 특구를 건설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해야 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IT산업의 경우에는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들만을 기존의 체제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IT산업은 소수의 전문기술자, 과학자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진·선봉 등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대규모의 주민들을 참여시킬 경우 외부의 개혁 개방의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IT 산업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체제가 소수 엘리트 전위대에 의존하는 체제라는 특징을

41)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2000.7.4).

42) 양문수,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기술중시 정책,” 참조.

고려할 때 소수의 전문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IT산업은 현재의 북한 체제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북한은 IT산업이 최선의 업종이며 이를 통하여 단번도약(추격발전)하여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 지도부는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최선의 대안은 IT산업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대 나진선봉지대에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장애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고급 두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한 것이 IT산업이라고 보고 내부적인 역량을 IT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IT산업 캠페인과 중고등학교에 대한 IT교육 지원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셋째, 북한은 전통산업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며 전통산업을 발전시켜 보려는 그동안의 노력도 실패하였으나 세계 경제도 IT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세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이미 몇 개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IT 산업의 육성 정책은 기존의 경제체제를 개혁개방 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최근 과거의 중앙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1998년부터의 '제2의 천리마 대진군', 1998년 이후 토지정리사업 과정의 개인 퇴기밭들 몰수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복원 강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이런 정책적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제도의 도입, 사유제로의 변화,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에서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북한의 IT 산업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기존체제의 변화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IT 산업이라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는 IT 산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IT

산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의 경제체제와 산업 공정에 대한 자동화, 정보화를 심화하여 사회주의의 중앙계획적 통제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기존산업의 '기술개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수적인 목적이 IT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IT 산업이 기존체제의 변화없이 오히려 기존체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악세사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IT 산업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IT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체제변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VI. 북한의 기술 중시 및 IT산업 육성 정책의 평가 및 전망

북한이 자신감마저 드러내 보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발전과 정보통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발전 전략이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 성공 가능할까? 북한 미래의 향방을 전망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볼 수 있다.

1.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북한이 I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어느정도의 진전을 이룩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일부 품목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있다.⁴³⁾ 북한에는 군수산업 인력중에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들이 민수산업으로 이전되어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조선컴퓨터센터 인력들도 원래 군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래 북한의 소프트웨어는 군사기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과학기술 전반에 있어서는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초기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많다. 북한경제가 내포적 성장

43) 자세한 내용은 박찬모, 위의 글 참조.

체제로 전환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술진전을 가로막는 북한 사회경제 체제내의 구조적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는 북한이 과학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중앙명령계획경제체제이다. 중앙의 허락이 없이는 하부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경직성이 기술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다. 구 소련의 「이즈베스차」지는 시베리아의 한 공장관리자가 난방장치를 교환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의 인가를 받는데 2개월이상 기다려야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는 모든 의사결정이 최고권력에 집중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⁴⁴⁾ 기업소 수준에서 생산량과 생산공정에 대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전에는 기술혁신이 어렵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이유는 중앙계획경제체제 때문이다. 중앙계획경제체제는 양적 목표달성에 치중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모험을 못하게 하는 체제이다. 공장, 기업소에서는 상부에서 하달되는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소의 목표량을 둘러싸고 기업소 당관료와 지배인간에 책임을 지고 생산라인을 교란하는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⁴⁵⁾ 북한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김일성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 공장, 기업소의 적지 않은 일꾼들이 당면한 생산에만 치중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는 거의 낫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 노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 좋은 기술 혁신안이 제기되어도 현행생산이 바쁘다는 구실 밑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⁴⁶⁾

44) 실비우 브루칸, 『「기रो에 선 사회주의』 (서울:푸른산, 1944), p. 57.

45) Robert Strayer, *Why Did the soviet Union Collapse? Understanding Historical Change*, (New York: M.E. Sharpe, 1998), p. 58.

46)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3.

기업소의 간부들이 기술개발 대신에 노동력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량의 증대를 추구하는 외연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정일은 이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부 일군들은 생산장성의 예비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낡은 설비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갱신하는데서 찾으려 하지 않고 낡은 설비를 그러안고 로력을 늘이는데서 찾으려 하고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설비를 갱신하지 않고 오래동안 쓰는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몇십년전에 나온 뺄스나 자동차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 쓰는것을 대단한것으로 여기면서 평가해주고있는데 이것을 좋은 일로 볼수 없습니다.⁴⁷⁾

셋째, 김정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과학기술자를 마치 잉여노동력처럼 사용하고 그들을 홀시하는 데도 있다. 과학기술자가 기업내에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위로부터의 지시에 시늉만 내는 악세사리 정도의 위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현상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마치 여유 로력처럼 생각하면서 연구사업에서 망탕 떼내여 다른 일에 동원시키고있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은 정력적인 탐구와 끊임없는 사색을 요구하는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성과는 하루이틀사이에 쉽게 이룩되는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이룩될수 있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을 짬짬이 부업을 하는 식으로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군들이 당면한 문제만 보고 전망적인 문제는 볼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업하여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⁴⁸⁾

넷째, 북한에서 기업수준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중의 하

47)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 『김정일선집』, 8권.

48)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 『김정일선집』, 8권.

나로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기업관리 방식도 지적할 수 있다. 대체로 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명에서 기업조직은 보다 유연해지고 기술적으로도 수직적 분업보다는 수평적 분업이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볼 때 북한이 새로운 기술혁명을 기존 조직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이 과연 생산효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적 통제가 체제유지상 불가피한 북한으로서는 대안의 사업체제가 가장 적합한 기업수준에서의 통제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북한이 새로운 질을 갖는 기술혁신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순조로운 기술혁신의 추진이라는 면에서 북한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⁴⁹⁾

대안의 사업체제는 기업소에서 기술을 잘 아는 기사장이 참모장으로 되어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하므로 과학기술과 생산을 옹기 결함시킬 수 있게 합니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함시키고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위에 올려세워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는데 대안의 사업체제의 우월성의 하나가 있습니다.—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⁵⁰⁾

대안의 사업체제가 이처럼 과학기술발전에 효율적인 체제라면 1961년부터 추진해온 대안의 사업체제가 북한의 낙후한 기술수준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대안의 사업체제가 과학기술 발전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대안의 사업체제’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김정일이 지적한대로 과학자 기술자가 되기보다는 당과 같은 권력기관에

49) 박형준, 김태영, 위의 글, p. 154.

50) 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창립 45돐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김정일 선집』, 11권.

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직업관은 과학자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흠시하다보니 사회적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바로 서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아들딸을 과학자, 기술자로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부모도 얼마 되지 않으며 어려서부터 과학자, 기술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많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딸을 상급학교에 보내도 자연과학을 전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졸업한 다음에는 과학연구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에 가서 일하는것보다 당기관이나 국가행정기관에 가서 일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⁵¹⁾

결국 북한의 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차원의 과학기술 중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전을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많다.

2. IT 산업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

북한이 최근들어서 중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곧 IT 산업을 의미한다. 과거의 중공업 우선 전략하에서 기술은 곧 기계제작을 의미했던 인식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IT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문이 많다.

첫째,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이라는 구호하에 생산공정의 정보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는 정보화 이전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이다. 연료 및 원료의 부족 때문에 공장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공정의 정보화 자동화라는 과제는 비현실적인 처방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폐쇄주의적 경제노선의 기초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하는 IT산업 정책의 한계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정보유입을 막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제망에 연결되지 않은 인트

51)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 『김정일선집』, 8권.

라넷을 운용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실험적인 연구는 되겠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IT 업계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보통신과 가장 거리가 먼 국가에서 정보통신산업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북한이 추구하는 IT산업은 정보화 산업과 거리가 먼 구상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IT 산업은 상당기간 동안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원래 IT산업은 프래그램산업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포함하지만 또 한편 기존의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통산업과 연관된 산업이다. 가령, E-mail은 신속한 정보와 자료의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정보교류의 시간과 공간 비용을 절약하고, 전자상거래는 기존 시장의 시간·공간·인건비를 절약하며, 은행 전산망도 기존의 금융거래에서 시간적·공간적 비용을 절약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IT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거대한 정보화의 시장을 움직이는 매개는 광고시장이다. 광고를 매개로 해서 인터넷망에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정보화를 적용시킬 전통산업의 기초가 취약하다. 북한은 정보의 유통도 제한되어 있고, 공식적인 시장도 없으며, 광고도 없다. 가장 큰 한계는 정보유통을 억제하는 정치적 한계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하드웨어의 발달이 상호작용하면서 한 부문의 발달이 다른 부문의 발달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북한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산업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IT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을 정보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장애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IT산업을 통한 단번도약의 전략은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넷째,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 북한 IT 산업 발전의 선행조건이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북한의 IT 산업 활성화에 구조적 제약이 되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바세나르 협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남북간에 IT 교류도 본격화 될 수 있다.

VI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은 외연적 경제발전 전략에서 내포적 전략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IT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경제회생의 승부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전망이 어둡다. 북한은 IT 산업에 경제회생의 승부수를 걸고 있으면서도 폐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IT 산업 자체가 갖는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폐쇄주의를 유지한 채 IT 산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소수의 기술인력에 의존하여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다수의 근로자가 외부의 영향력에 노출되지 않아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즉 제도를 손대지 않고 사상통제를 지속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북한이 과학기술발전과 IT 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으로서 IT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존 경제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IT 산업 육성의 부산물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외자를 벌자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하나의 시행착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도약의 기반이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중시와 IT 산업의 중시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정치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보산업이 김정일의 이상화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아이디어를 김정일이 제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의 언론은 연일 강조하고 있다. IT 산업의 장미빛 홍보를 통하여 김정일은 주민들의 식량난을 아랑곳 하지 않고 군부대나 찾아다닌다는 비판을 면하는 등 단기적으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IT 산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이 전략이 오히려 개혁개방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의 앞날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현재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발전과 IT 산업의 육성이 한계에 다다르면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기술혁신에서 시작하였다가 제도개혁으로 옮겨 갔듯이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인가? 소련과는 달리 현재 북한이 I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야 바세나르 협정과 같은 제약조건도 해소될 수 있으며, 더욱이 인터넷을 개방하는 등의 정치적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다. 북한의 IT 산업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